

전력·에너지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성과 미흡 기관장엔 해임·경고조치

총 87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한전·한수원·동서발전 등 'A등급'
2년째 'D등급' HUG 기관장 사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체 87곳 중 15곳(17.2%)에 그쳤다. '탁월(S)' 등급은 전무했고, '보통(C)' 이하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특히, 전력·에너지 공공기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총 87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정부정책 이행에 성과를 낸 곳이 많았다. 반면,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은 사업성과 부진에 비위행위, 중대재해 등 위험요소가 공통적으로 작용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곳으로 이 가운데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5곳으로 모두 에너지·전력 분야다.

한전은 실적 개선에 따라 9년 만에 A 등급을 회복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4조13억원, 영업이익 8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총 87개 공공기관 대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합계
탁월 S	0	0	0
우수 A	5	10	15
양호 B	11	17	28
보통 C	9	22	31
미흡 D	6	3	9
아주미흡 E	1	3	4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정민주 기자

3489억원으로 매출은 전년대비 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순이익은 전년대비 179.5% 증가한 3조7484억원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자구노력 또한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성과 영향이 컸다. 지난해 매출 역시 13조6021억원, 영업이익은 1조6017억원을 기록하며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한국동서발전도 전년 양호(B)등급에서 이번에 우수(A) 등급에 올랐다. 동서발전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

너지전환 전략, 8년 연속 중대재해 없는 일터, 유연탄 도입단가 절감 발전사 1위 등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건설 경기 침체 영향으로 국토·교통 관련 공공기관의 성적은 저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부동산원·국토안전관리원·한국철도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3곳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유병태 사장은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관장 해임 건의와 함께 경영실적이 미흡한 4개 기관장과 사망사고 발생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10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의 상임감사도 경고 조치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논농 전문생산단지를 방문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쌀값안정 위해 양곡법 개정 약속”

전북 부안 ‘논농 전문생산단지’ 방문
타 작물 재배 예산 대폭 확대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연임 이후 첫 행보로 전북 부안에 자리한 ‘논농 전문생산단지’를 찾았다. 이 단지는 발작물인 콩을 논에 심어 재배하고 있다.

논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27일 당정 간담회에서 논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과 결을 같이하는 품목 중 하나다. 당정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내걸었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과 만나, “논에 벼를 대신해 콩과 같은 주요 작물이 보

다 많이 재배되면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도 대폭 확대시키는 한편, 불가피한 과잉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매입 등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양곡관리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농업인들은 논콩의 안정적 생산과 경영을 위해서는 배수개선, 안정적 판로 지원, 재해인정 및 보험가입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재취업 성공 1위 자격증은 ‘전기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재취업 분석
자격증 취득 후 재취업 성공률 41%

재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으로 전기산업기사, 승강기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등이 꼽혔다. 2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재취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평균 재취업 성공률은 41.1%로 나타났다. 재취업 소요 기간은 평균 78.9일이었다.

분석 결과,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61만명 중 재취업(이·전직) 목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만 4031명(3.9%)이었고, 이들 중 9872명

이 실제 재취업에 성공했다.

자격 등급별로 산업기사가 44.0%로 가장 높은 재취업 성공률을 기록했고, 이어 기능사 41.8%, 서비스 분야 40.9%, 기사 39.3%, 기술사 39.0%, 기능장 28.0% 순이었다.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은 종목(취득자 50인 이상 중)은 각 등급별로 전기기사가 48.6%, 전기산업기사 60.8%, 승강기기능사 58.2%, 직업상담사 2급 44.6%였고, 재취업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종목(재취업자 수 30인 이상 중)을 등급별로 보면, 에너지관리기사 42.2일,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43.7일, 자동차 정비기능사 52.7일, 사회조사분석사 2급 82.6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K-푸드 위조상품 집중 단속

해외 저가·저품질 위조상품 늘어
특허청과 우리 브랜드 보호 나서

정부가 K-푸드의 위조상품 대응 강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은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K-푸드 위조상품 대응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로 퍼진 K-푸드 인기에 편승해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위조상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양 기관은 우리 수출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K-푸드의 브랜드 가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민간에서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식품, 인삼공사, 빙그레 등의 주요 수출기업과 식품산업협회도 회의에 합류한다. 회의 내용은 ▲상반기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택 모니터링 결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실적 ▲하반기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등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외 위조상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애로 상담 및 교육·자문, 지적권 출원·등록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첨단 소부장 민간투자 8501억… 역대 최고치

183개사 투자 유치… 전년대비 653억▲
AI반도체·디지털헬스케어 비중 높아

정부의투자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민간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반도체 분야에만 전체 투자액의 3분의 1일 몰리면서 미래 산업 핵심영역으로 투자가 집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소부장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총 8501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848억원에 비해 653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넘었다. 투자 기업은 183개사로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 10억2000만원

증가한 4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AI반도체가 24개 기업에서 2602억원을 유치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디지털헬스케어 627억원(13개사) ▲로봇·자동화 기계 441억원(12개사) ▲차세대전지 분야 433억원(12개사) 등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가 이뤄졌다.

AI 반도체 기업 오픈엠티테크놀로지 경우 올해 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고속·저전력 메모리 기반 경량언어모델 전용 AI반도체’를 개발 중이며, 이번 자금을 활용해 상용화와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기차 부품 기업 이티에스(ETS)도 전해액 주입 장비를 국산화하며 17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해당 장비는

전기차 이차전지의 핵심 제조공정 중 하나로,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성과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정부 R&D와 민간 투자로 동시에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0년~2024년까지 산업부 ‘소부장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누적 기업 수는 1073개사이며, 이들이 유치한 총 자금은 4조4786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정부 R&D 자금은 2조 6867억원, 민간투자자금은 1조7919억원이다.

이 기간 833개 비상장 선정기업 중 16%인 135개사가 IPO에 성공해, 일반기업(3.6%) 대비 높은 상장비율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7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하세요”

기초생활수급가구 전기요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7월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기호민감 계층에게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단가를 통합해, 사용자가 필요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가구별 지원 단가 금액 전체를 7월 1일부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세대원 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는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다.

올해 바우처는 지난 6월9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현재까지 총 113만6000가구에 지급이 완료됐다. 이는 전체 목표(130만7000가구)의 86.9% 수준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잔여 가구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신청 가구를 위해 우편·문자 발송, 지자체 연계 홍보 등을 강화하고,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서비스는 지난해 3만1000가구에 서 올해 4만7000가구로 확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